

정부 기관 '호남 인사 물갈이' 너무 한다

기관장 10여명 퇴진 압력에 사표…중간 간부급까지 강요

정부 핵심요직 배제 이어 공기업서도 인사 차별 심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광주·전남 지역 출신 공공기관장 10여명이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사표를 내 과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기제를 무시한 정권 차원의 퇴진 압력은 공공기관장을 넘어 임원 및 중간 간부급까지 확산되고 있어 공기업에서도 '호남인맥 고사' 현상이 재연되자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부 산하 각 공기업에 따르면

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를 남겨두고 자리를 물려난 광주·전남지역 출신 공공기관장은 무려 10여명에 이른다.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주현 지방행정연구원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물갈이 압력에 시달리다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압력은 공공기관장을 넘어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임원급과 중간 간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전남 출신 한국토지공사 모 중간 간부는 유무형의 퇴진 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기업 이사 등 임원급에 대한 물갈이도 공공기관장이 정리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상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퇴진 압력에 맞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내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의 퇴진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 정부 측의 퇴진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측은 지난 7월부터 이 이사장에게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기감사가 7월로 예정돼 있음에도, 현재 국제화재단은 지난 19일부터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퇴진 압박'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여론은 공공기관장 교체가 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성격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보다 구 정권 인사의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영호남 시·도지사 정부에 촉구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지역 시·도지사는 오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제11회 협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계획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가 중앙과 지방의 격차

를 가속화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08 광주·전남 봄분의 제7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세계 광엑스포 대회 홍보와 관람 협조를 시·도간 협력 안건으로 채택했다.

전남도는 부산·경남부과 공동으로 북포~부산 남해안 철도 건설에 협력하는 한편 88고속도로 조기 완공, 지리산권 개발 등 영호남 공동 현안을 해당 지역 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penfoot@

한 총리 유임·개각 중소폭 될 듯

정운천 농림·김성이 보건기록부 장관 교체 유력

정부 대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적쇄신의 2단계인 개각에 관심이 쓰이고 있다.

개각은 국정 공백의 우려를 감안, 18대 국회 개원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 청문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조기 개각은 상당 기간의 '정관 부재'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한승수 총리의 유임 여부다. 청와대가 개각을 앞두고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 내에서는 한 총리 유임분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류우익 전 대통령직장을 포함, 수석 전원이 교체된 것도 상대적으로 한 총리 유임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적쇄신의 큰 그림을 내보

인 만큼 개각 폭에 대해선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관의 경우 교체가 중·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종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특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정말 짧았다"면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일을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쇠고기 파문의 직접 책임이 있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의 교체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비(非) 영남권 인사로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농업 정책에 정통한 이명수 전 멘마크 대

사와 홍문표 전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신상진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의사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이들 보다는 고경화 전 의원과 이경호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의 가능성은 한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일병 광발연 원장

민주 위원장직 사퇴해야"

광주시 권고

광주시가 최근 취임한 채일병 광주 발전연구원장이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 맡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2일 "채 원장에게 광주발전연구원장을 맡아 업무에 매진해야 할 상황에서 정당의 중요 직책을 맡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겹쳐으로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원장은 23일 광주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2일 광주시 서구 삼부시민공원에서 열린 '나라 사랑 6.25km 걷기대회'에 참가한 1천여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서구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30개월 탓에 30점 차이가 나나??!

호남 상공인과 간담회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광주를 찾아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국세행정'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또 한 청장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 초청으로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북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호남 상공인과 간담회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kr

한상률 국세청장 来光

상공인들로부터 기업경영 과정에서 어려움과 겪는 각종 행정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고유가·화물연대 과업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jtlee@kwangju.co